

전남도의원 5명 중 3명은 농부?

경실련 조사...56명 중 35명 농지 소유, 영광·함평군수 농지 부자 전남농민단체, 전남도·정부에 공직자 투기 등 전수조사 촉구

영광군수와 함평군수가 각각 1만평에 가까운 농지를 소유하고, 전남도의원 5명 중 3명꼴로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담긴 시민단체 조사결과가 나오자 전남 농민단체가 발간하고 나섰다. 헌법에 규정된 '경자유전(耕者有其田) 농사짓는 이가 농지를 소유'의 대원칙을 공직자가 보란 듯이 짓밟고 있다며, 공직자 소유 농지부터 투기 등 불법성에 대한 전수 조사를 즉각 시행하라는 요구다. 헌법은 경자유전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나 하위 규범인 농지법은 주말제농지, 상속농지 등 16개 예외 규정을 통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무제한 허용되고 있다며 '농지법 대수술'도 촉구했다.

전농 광주전남연맹 등 7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광주전남농민단체협의회는 12일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전국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 농지 소유 실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을 거론하며 정부와 전남도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민단체의 요구는 공직자 농지 소유 및 이용에 대한 전수조사다. 농지 소유 및 이용 과정에 불법이 있는지, 투기는 없었는지 조사해 공표하라는 것이다.

또한 모든 공무원이 매년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를 보고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놴다. 공무원의 직불금 부당 수령 여부, 불법 휴경 및 전용, 경작 사실 확인서 사실 점검을 위해 마을별 농지관리위원회 설치도 주장했다. 아울러 공직자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농지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 관계자는 "경실련 조사결과, LH 투기 사태 등을 통해 행정, 입법, 사법 고위층부터 지방 공무원까지 농지 투기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농지는 (식량 생산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공재이며, 농지를 투기나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삼는 모든 행위에 대해 엄벌해야 하며 투기 이익은 환수하고 투기농지는 몰수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이 지난 8일 내놓은 '2022년 지방선거 대비, 광역지자체장, 기초지자체장, 광역의원 농지 소유현황'을 보면, 광역지자체장의 33%, 기초지자체장의 52%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광역의회 의원 46%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준성 영광군수가 3.3ha(민주당·9851평)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농지를 소유한 117명의 전국 기초단체장 중 농지 최대 면적 소유자로 이름을 올렸다. 두 번째로는 이상의 함평군수로 2.8ha(민주당·8512평)에 이르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광역의원 가운데선 정광호(민주당·신안2) 의원

과 사순문(민주당·장흥1) 의원이 각각 농지를 2ha(6879평), 2ha(6788평) 보유해 면적 기준 전국 7, 8위를 기록했다.

특히 전남도의회 의원 56명 가운데 35명(62%)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면, 전남도 의원 5명 중 3명은 농부와 도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셈이다.

농민단체는 전남도를 향해서도 조속히 모든 공직자의 농지 소유 및 이용 현황을 조사하고 발표하는 것이 농민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농 광주전남연맹 등 전남 7개지역 농민단체가 12일 오전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출직 공직자의 농지보유를 규탄하고, 공직자 소유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전농 제공>

“어르신들 활기찬 노후생활 적극 지원”

‘어르신 특별주간’ 맞아

이용섭 시장, 노인복지관 방문

이용섭 광주시장은 12일 동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한국노인복지관협회광주지회 소속 복지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어르신 특별주간(7월12~15일)의 첫 번째 행사로, 사회적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복지관 축소 운영과 이용자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고령화로 인한 복지관 이용자 증가 등 따른 운영의 어려움 등을 호소했다.

노인복지관은 2005년 지방이양시설로 전환되면서 자치구별 재정 여건에 따라 복지관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매년 운영비 10억원과 프로그램 운영비, 종사자특별수당을 지원하고 노후화된 시설 기능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지만, 양질의 노인복지관 운영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이



사회적 삶을 경험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동구 세연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대화 시간을 갖고 무더위와 장마 대비책 등도 살피었다.

이 시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경로당 이용 등에 불편함이 있겠지만,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경로당이 이웃과 주민이 함께 마을 소통의 장이 되도록 지원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13일에는 서구 시니어클럽교육장과 시장형일자리 현장을 찾아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온라인 소통 플랫폼 ‘바로 소통 광주’ 자리매김

개설 이후 2년간 1422건 접수

광주시 온라인 소통 플랫폼 ‘바로 소통 광주’가 시민 아이디어를 정책화하는 창구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바로 소통 광주에는 2019년 3월 개설 이후 모두 1422건 시민 제안이 접수됐다. 연도별로 2019년 390건, 지난해 629건, 올해 상반기 403건이었다. 이 기간 월평균 43건, 52건, 67건으로 증가해 활성화 추세를 보였다.

접수된 제안은 30일 동안 공감자가 50명이 되면 다음 단계인 토론으로 이어져 시민권익위원회에서 광주시 관련 부서에 검토를 요청한다.

이어 토론에 참여한 시민이 30일 동안 100명 이상이면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시민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정책 채택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광주시에 권고해 실행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정책 27건이 권고됐다.

지난해 10월 제안된 ‘운암3단지 재건축 지역 내 경양초 이전 부지 활용’, 지난 2월 ‘전남-일신방직 재개발과 관련한 시민 의견 경청’ 등 제안은 지역 이슈로 부상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검색 기능 개선, 콘텐츠 재구성, 시민 제안과 여론조사 등 표출 방식 개선, 정책실행 사후 관리 강화 등으로 시민 참여도를 높일 방침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한부모 가족 가사 지원 서비스 호응

광주시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한부모 가족 가사 지원 서비스가 이용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이용 가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가정생활에 도움이 된다(90%), 가사 도우미 활동에 만족한다(85%), 타인에게 소개할 의향이 있다(95%) 등 이용자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집안 정리, 가사 시간이나 피로 감소 등 효과 외

에도 가사 도우미와 소통 등을 장점으로 꼽은 의견도 있었다. 가사 지원 서비스는 중위소득 120% 이하 한부모 가족 중 일정 조건 해당자를 대상으로 주 1회(회당 3시간) 이용할 수 있다. 청소, 세탁, 설거지 등을 도우며 회당 이용 요금 4만5000원 중 본인 부담은 5000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수행기관인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70-4204-6314)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

25.4대 1

광주시 공채 경쟁률

10명 중 1명 40대 이상

광주시 올해 두 번째 공채 시험 경쟁률이 25.4대 1을 기록했다. 40대 이상도 10% 가까이 지원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5~9일 7급, 연구사, 고졸 구분 모집 등 지방직 공채 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한 결과 57명 선발에 1446명이 지원했다.

경쟁률은 2019년 31.0대 1, 지난해 35.5대 1보다 떨어졌다. 전국에서 동시 시행하는 지방직 시험에 1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접수 방식이 변경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일반행정 7급은 15명 선발에 1013명이 응시해 가장 높은 67.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3명을 선발하는 일반토목 7급은 6.3대 1, 2명을 뽑는 건축 7급은 11.5대 1이었다. 기술계고 졸업자(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졸 구분 경력 채용은 4개 직렬, 9명 모집에 80명이 응시해 8.9대 1을 기록했다. 지원자 중 여성이 54.3%(785명)로 지난해(52.6%)보다 더 비중이 높아졌다. 평균 연령은 29.5세였으며 40대 이상이 9.7%를 차지해 고령층 지원 열기를 반영했다.

민간 분야 조기 퇴직,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공직에 제2의 취업을 하려는 고령층 수험생이 많아졌다고 광주시는 분석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